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법정다툼 비화 ▶2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주 동구 장동은 '커피숍 天下' ▶9

kwangju.co.kr

박인비 '캘린더 그랜드 슬램' 해낸다 ▶15

제19542호 1판 2013년 8월 1일 목요일 (음력 6월 25일)

중국어선 몰려온다… 서남해 긴장감 고조

오늘 금어기 해제…불법어선 30만척 예상

목포해경, 흥기무장 어선 단속 대책 고심



주렁주렁 익어가는 여름 지난 31일 함평군 월야면 용월리 달맞이 공원 내 폭 4m, 길이 200m 규모로 조성된 조종박터널에 조종박과 호박, 수세미 등이 주렁주렁 열렸다. 주민들이 시원한 조종박그늘 속을 걸으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함평=나영주기자 mjna@

서·남해안 바다가 일축 즉발의 긴 장감으로 출렁이기 시작했다. 1일 중국 유자만 어선들의 금어기가 해제돼 황금 해역인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 (EEZ)을 탐내는 무허가 중국 어선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조기·갈치·삼치 냄새를 맡고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침범, 마구잡이식 무허가 중국 어선이 30만척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다, 쇠톱·도끼·삼지창 등 흉기로 무장한 채 선박에 쇠창살을 끌고 철판을 두르는 등 단속을 피하는 수법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어 해양경찰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 31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중국 유자망 어선에 대한 금어기(6월1일 낮 12시~8월1일 낮 12시)가 1일 오후 해제되면서 사전 허가받은 중국 어선 1658척 중 유자망 673척에 대한 EEZ 우리측 구역에서의 조업이 허용된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 측 수역에서 조업하는 유자망 어선이 올해 말까지 허가받은 어획량은 7672t에 이른다.

문제는 허가받지 않고 우리측 황금 해역에 눈독을 들이는 불법 중국 어선들, 이들은 춤출한 어망을 사용해 무차별 포획으로 치어나 잡어류까지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는 등 국내 어족 자원의 씨를 말린다는 게 어민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목포해경 등은 올해 우리측 해역 (海域)을 침범, 불법 조업에 나설 중국 어선이 30만척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내놓은 '불법 조업 종합대책'에 따라 불법 조업하다 적발되는 중국 어선에 물린 벌금 (담보금) 기준을 상향, 적용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467척(2011년 534척)이나포돼 171억원(2011년 145억)의 담보금을 무는 등 불법 조업이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불법 중국 어선들의 저항이 갈수록 흥포화하는 추세인데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업 재개를 맞는 경찰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갈수록 새로운 수법이 생기면서 올해 단속을 피하기 위한 어떤 '신무기'가 출현할지 모른다는 얘기다.

단속에 맞서기 위해 쇠톱·쇠파이프·삼지창 등을 휘두르고 가스통에 불을 붙이며 죽기살기로 저항하는 것은 비일비재하고 해마다 단속을 막기 위해 단체로 선체에 쇠창살을 달아놓

더니 철판을 둘러 쳐 승선을 막는 수법까지 등장했다.

해경은 지금까지 헬기 바람을 이용해 서로 박차로 연결해 거대한 선단 (船團)을 이룬 대열을 흐트러트리고 물대포와 쇠루액을 쏴 진압해왔지만 높이 2m가 넘는 철판을 두른 중국 어선들의 경우 승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해경측 설명이다.

농림부 산하 어업지도선의 경우 지난 1월 무허가 조업 어선을 적발하고도 이들의 강력한 저항에 단속을 포기하는 '굴욕'을 겪기도 했다.

경찰은 급기야 지난 5월 철망을 강제로 뜯어내고 진입하는 방식으로는 그대로 놓아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술 개발 회의를 통해 변형 사다리를 만들어 승선하거나 고출력음파를 발생해 제압하는 '음향 방패' 등의 전략을 모색하기도 했다.

정부의 '말 뿐인 대책'에 대한 비판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11년 12월 불법 조업 대응 강화 대책으로 '한·중 어업쿼터 협상 시 불법조업 적발 주의 등과 다음해 조업쿼터를 연동주간'이라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재원대책 없는 고교무상교육 지방재정 파탄"

당정 '지자체 절반 부담'案 시행…민주당 반발

교총 "찜통교실 등 공교육 환경 개선이 우선"

정부와 새누리당이 발표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침(광주일보 7월 31 일자 7면)에 대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데다 안정적 재원 마련 방안이 없는 '졸속대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부산, 대구 등 8개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감당할 수 없고 입장장을 밝힌 바 있다"며 "고교무상교육 재원 3조4000억원 중 지방이 50%

체계 등 학교 비정규직 대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7만명에 달하는 이탈 학생과 '찜통교실' 등 악화하는 교육 여건을 뒷전으로 하고 중산층의 교육

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고교 무상교육이나 대학등록금 인하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면 이는 정책의 우선 순위가 잘못된 것"이라며 "교육복지에 떠밀려 공교육의 열악한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현실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을 1년 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대책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의 대책을 수용한 재탕"이라면서 호봉제에 준하는 보수

민주당이 지난 31일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 분부"로 확대 개편해 당대표인 제가

본부장을 직접 맡아 이 국면을 이끌겠다"며 "국민과 하는 첫걸음으로서 서울

〈관련기사 4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의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마당에 더는 참을 수 없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국정 조사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해 인내할 만큼 인내해 왔다"며 "지금까지 많은 국민의 의견을 들었고, 오늘의 총을 통해서 당의 결의를 모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 국민과 함께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쟁방침으로 "그동안 주미애 본부장이 이끌어왔던 '정치공작 진상 규명 및 국정원 개혁운동본부'를 '민

2013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 원서접수 : 8월 5일(월) ~ 16일(금)
입학 대학원 062-605-1115
문의 학부 062-605-1114
광신 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2013 제2회 광주·전남 청소년 축제

Gwangju & Jeollanam-do Youth Festival 2013

2013. 8. 31(토) 오전 10시
광주월드컵경기장 특설무대

- 중·고교생 댄스·밴드·풍물 등 각종 경연
- 대학 선택을 위한 입시홍보관 / 진로적성 상담관 운영
- 4대악 척결 UCC공모전 및 다양한 부대행사
- 유학 / 화상영어 설명회
- 대학 인기동아리 밴드·댄스 공연
- 광주FC 선수단 팬사인회 및 경품이벤트

| 주 최 | 광주지방검찰청 · 광주광역시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
광주일보사
| 후 원 | 교육부 · 여성가족부 · 안전행정부 · 문화체육관광부 ·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광주지방경찰청 · 전남지방경찰청

경연대회 모집안내

- | 모집분야 | 밴드 경연, 댄스 경연, 풍물 경연
4대악 척결 UCC공모전
3:3 길거리농구대회
- | 모집기간 | 2013년 8월 19일(월)까지
- | 문 의 | 062-220-0555 / 010-5020-5008
- | 교육부장관상 및 총 상금 1,000만원 상당 수여